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출처와 정리방안 연구: 우원식 컬렉션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venances and Arrangement of Legislative Activity Records: Focusing on the Woo Won-Shik Collection

이재윤(Jaeyun Lee)¹, 박태선(Taesun Park)²

Email: wodbs4697@naver.com, 88_park@naver.com



1 제1저자 국회의장실 기록비서관
2 교신저자 국회의장실 기록비서관

논문접수 2025.07.14
최초심사 2025.07.26
게재확정 2025.08.25

ORCID

Jaeyun Lee
https://orcid.org/0009-0001-1945-2504

Taesun Park
https://orcid.org/0009-0002-0323-0306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초 록

본 연구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이 가진 복합적인 성격에 비해 기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기존 맥락 탐구와 방법론 연구가 미약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국회기록보존소가 보유한 기능분류 중심의 수집정책과 대뉴얼은 실제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이 생산·보관되는 현실과 유리되어 있으며, 한정적인 맥락만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위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출처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다양한 출처 맥락을 기능, 순차, 연대기, 보관 이력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탐구한다. 나아가 실제 5선 국회의원이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인 우원식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기록 컬렉션을 구축한 경험을 그 사례로 제시한다. 의원 자택, 지역사무실, 보좌진 등 보관 이력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출처와 각 출처가 기록 생산자인 국회의원과 맺는 관계, 출처별 기록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정리하는 방안을 함께 소개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motivated by the recognition that existing contextual and methodological research for systematically accumulating records is insufficient, given the complex nature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legislative activities.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policy and manual, which focus primarily on functional classification, are disconnected from the actual creation and custody of legislative activity records and address only a limited context.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explores the diverse provenance contexts in legislative activity records, categorizing them into four types: function, sequence, chronology, and custodial history, based 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provenance and current status analysis. As a case study, it presents the experience of building a collection of legislative activity records for Woo Won-shik, a five-term National Assembly member and Speaker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during its first half. The study focuses on three sources—the member's house, constituency office, and legislative aides—analyzes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member as the record creator, examines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each provenance, and proposes methods for organizing these records.

Keywords: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출처, 지역사무실, 보좌진
National Assembly member, legislative activity records, provenance,
constituency office, legislative aide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기념비적 문헌 『아카이브 열병』에서 아카이브 기술(technology)이 더는 지난 기록이 생성되는 순간만을 결정하지 않으며 기록 가능한 사건의 제도 자체를 결정한다고 진술했다. 새로운 기록 매체나 기술의 등장인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는 원리와 같다. 앞으로 기록할 수 있는 맥락과 의미는 지금 기록하는 구조에 의해 미리 코드화되어 있는 셈이다(Derrida, 1995).

국회는 대통령과 함께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성을 가진 이들의 회의체로, 입법 과정 등 국가적 의사결정 구조가 집적된 장소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원대로 수렴해 갈등을 해소하고 심의·토론·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국가정책을 협의한다(전진영, 2011). 국회 기능 수행 과정에 국회의원은 핵심 주체이며,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은 단지 조직의 기능에 대한 설명책임을 넘어 조직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반이 된다. 특히 최근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국회는 민주주의 위기를 비롯한 국제정세의 변화 가운데 그 기능과 역할을 정립해 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는 이러한 고민과 조응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년 설립된 국회기록보존소는 법 기반이 미약함에도 핵심 구성원인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회도서관법』 제2조 4항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평가·활용’ 조항을 추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후 2020년엔 『국회의원 기록관리 매뉴얼』을, 2024년 12월 『국회 의정활동기록물 수집·관리 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이 수행하는 기능과 업무를 도출하고 자체적인 수집 기준을 마련하여 국회의원 임기 종료마다 몇몇 의원실을 대상으로 기록을 수집해 왔다. 다만 여전히 수집 체계나 기록에 대한 연구분석, 인력 등 구조적인 환경은 열악한 수준이다.

가령 위 『기본정책』에 따르면, 국회기록보존소가 가진 기존 수집 정책과 방향이 “포괄적, 추상적으로 서술되어 구체성이 결여”(국회기록보존소, 2024, 22)되어 있으며, 의정활동기록물¹⁾ 중 국회의원 기록이 54%를 차지함에도 실상 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수집이 곧 기록에 대한 정리(arrangement)·기술(description), 그리고 공개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과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기록 수집 및 정리·기술에 실질적인 단서로 작용하는 기록 출처(archival provenance)에 대한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에 대한 논의는 기록학계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 기존 연구는 북미와 같은 국외 연구 결과를 참조(이원영, 2004)해 그 속성과 내용을 탐구하거나 의회 및 국회의원(실)의 기능 분석을 토대로 연역적으로 접근(최혜영, 이승일, 2019; 한은정, 임진희, 2009), 관련 법제의 제·개정(김장환, 2018)을 통해 기록관리체계(recordkeeping system)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A 의원의 전자기록을 대상으로 기록화를 시도한 연구(장주영, 2016)나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실질적 생산·보관·활용의 주체로 보좌진을 주목하고 기록관리 관련 보좌직원의 실태를 탐구한 연구(장연희, 윤은하, 2024)가 있긴 했지만, 실제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컬렉션 구축 사례를 기반으로 국회의원에 한정해 의정활동 기록 출처를 귀납적으로 분석하고 정리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드물었다.

기존 연구의 한 경향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생산 단계의 통제를 위해 처리과-기록관(record center)-영구기록물관리기관(archives) 체제의 구축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의의 입법 과정²⁾을 비롯해

1) 의정활동기록물은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해 생산·접수된 기록 중 국회 소속기관에서 생산·접수한 공공기록물을 제외한 기록으로, 국회의원기록물, 정당기록물, 민간기록물 등을 의미한다(장연희, 윤은하, 2024).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속성을 살피고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이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과 구조로 생산되는지 실증적으로 탐구하기 이전에 기능분류와 입법에 입각한 기록 통제(record control)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는 국회와 국회의원 조직의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강조하며, 권력 수행에 대한 시민의 견제 및 감시 수단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바라보는 다소 협소한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조직의 정체성 형성 기반이라기보다 국민의 알 권리나 의정평가를 중시하는 시민단체의 관점을 십분 반영³⁾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그러한 과정에서 국회의 고유기능을 넘어서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다양한 생산 맥락(formation context)을 어떻게 기록의 정리·기술에 활용하고 기록과 함께 풍부하게 축적해갈지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지금껏 국회는 어떤 맥락을 앞세워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수집·정리하고 이를 공개할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지 못했다.

기록학계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과 관련해 가장 문제로 지목되어 온 것은 법적 강제력의 부재(김장환, 2018)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입법을 통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단서와 방침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역설적으로 입법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나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고유한 특성과 맥락을 탐구하거나 그 산출물인 기록을 어떻게 수집·정리·기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 연구와 사례 수집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의정활동 기록 수집을 명시한 국회기록원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가 개최된 상황을 참작하면 더욱 그렇다.⁴⁾ 게다가, 추후 자세히 논하겠지만 기존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준용해 온 국회의원(실)의 고유기능 및 업무분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수집·정리·활용하는데 그리 유용하게 쓰이고 있지 못하다. 실제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이 기록을 생산하는 방식과 환경이 국회기록보존소의 매뉴얼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천착해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 기록의 다양한 맥락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가 필요하다. 출처(provenance) 관점에서 의정활동 기록의 생산·보관 환경을 규명하고 기록 생산 및 보관 행위와 밀접한 다양한 맥락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록 출처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출처 맥락을 네 가지 유형으로 도출해 분석한다, 이에 더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기록 컬렉션을 실제로 구축해 봄으로써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출처와 출처별 특징을 도출하고 그 정리방안을 모색한 과정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024년 7월 국회의장실 산하에 기록비서관이 최초로 신설되었으며 국회기록원 설립을 준비하는 동시에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선제적으로 연구할 기록연구팀이 구성되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관리가 국회기록원의 주요 기능인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에 대한 생산 맥락을 연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록연구팀은 2025년 초 우원식 컬렉션에 관한 수집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수집 작업에 착수했으며, 수집한 자택 및 지역사무실 기록을 대상으로 정리·기술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정리·기술을 수행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기록연구팀의 활동 과정에 따른

2) 입법 과정이란 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 전반을 지칭하지만, 나아가 “국민의 대표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며, 다양한 의견을 통합·조정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국회사무처, 2024, 12)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이경선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화에 관한 검토(2017)에 따르면 의정활동 감시에 방점을 둔 민간이 국회 기록 사업을 주도할 경우 공약 이행 여부나 의정활동 성과 평가와 공개를 중시한 나머지, 의정활동을 영위하며 파생되는 ‘비성과적, 비정형적 의정활동 기록’에 대한 수집 노력을 간과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지에 동의한다.

4)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 2025년 7월 11일, 국회의원회관.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례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우원식과 그 보좌진의 상황에 해당하며, 이를 다른 국회의원(실)의 의정활동 기록을 관리하는데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 구체적 수준에서 각 국회의원의 결정과 성향에 따라 기록의 생산 환경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일반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론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전체 양상과 출처에 관한 연구나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사례를 중심으로 의정활동 기록과 그 출처를 질적으로 탐구하고자 했다.

우선 국회기록보존소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관리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 조사 및 국회기록보존소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문헌 조사의 대상은 국회기록보존소에서 발행한 정책연구보고서, 학술 문헌 등으로 했다. 심층 면담은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관 A(10년 이상 근무) 및 사서사무관 B(5년 이상 근무) 등 2명과 2월 25일, 기록연구팀이 작성한 수집정책에 관해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관이 A가 보내온 피드백을 바탕으로 1시간 40분 가량 진행했다. 이는 현재 국회기록보존소 운영하고 있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관련 수집·정리정책과 실제 취득한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수집과 정리·기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면담 내용은 수집·정리·기술 정책 및 수집을 둘러싼 기록관리환경과 실질적인 내용,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비구조화된 형태로 비교적 자유롭게 논의했다. 면담을 통해 기존 국회기록보존소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체계의 한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가고자 했다.

한편 깊이 있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맥락 탐구를 위해 먼저 기록 출처에 대한 기록학계의 담론, 특히 Bearman과 Lytle(1985)의 논의를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기록 검색을 위한 접근점(access point)으로 출처를 바라보는 관점에 착안하여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이해하기 위한 출처 맥락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탐구한다. 이후 우원식 의정활동 기록 컬렉션과 컬렉션의 주요 소장처를 도출하고 실제 우원식 컬렉션을 수집, 정리, 기술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소장처는 어떤 성격을 갖는지, 소장처별 속성에 따라 기록을 어떻게 정리·기술하면 좋을지 그 방안을 모색해 예시와 함께 제시한다.

출처는 기록이 생겨난 근거나 기원을 설명해 주는 정보이며, 기록 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주체와 기록 생산자 간의 관계를 지시한다. 따라서 단지 기록 정리의 수단뿐 아니라 기록관리자는 물론 이용자가 기록을 이해하고 검색하기 위해 참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본 연구는 출처에 대한 넓은 해석과 정의를 준용하되, 필요에 따라 기록의 기원을 알려주는 주요 맥락과 구체적인 소장처(자)를 지칭하는 개념 정의를 병용했다. 물론 두 가지 출처 정의는 모두 기록 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주체와 기록 생산자 간의 관계라는 의미에서 일맥상통한다.

한편, 본 연구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헌법·국회법 등으로 명시된 최소한의 기능을 넘어, 해당 직무권한을 해석하는 개별 의원의 고유하고 다양한 관점이 가미된 활동이자, 입법 과정과 속의적 가치, 지역구민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활동으로 보는 이전 연구(이재윤 외, 2024)의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국회의원은 구체적인 업무기능에 따른다기보다 법적 권한과 의회 제도를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개인(individual)이면서 동시에 권한이 부여된 주체(authorized agent), 즉 법인체의 정체성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관점 역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수집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맥락을 포착해 이를 정리·기술에 활용하는 기록 과정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그에 따라 개인 기록의 특성을 연구한 오명진(2017)의 연구를 함께 참조했다. 개인은 조직과 다르게 기록 활동을 규정하는 규제법령이 없고 개인의 삶 전체가 기록 활동으로 해석되며, 이때 삶을 둘러싸고 있는 성격을 비롯한 개인적 특성과 내·외적 환경이 주요한 외부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2.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출처와 맥락

2.1 국회기록보존소의 수집정책과 현황

현실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 개선해 가야 할 내용과 방향을 타진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국회기록보존소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국회기록보존소 소속 연구관과 사무관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수집정책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기능분류 활용, 수집과정 전반, 지역사무실과 보좌진 관련 출처 검토 여부 등을 논의했다.

국회기록보존소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에 관한 수집정책은 『국회의원 기록관리 기본계획』(2016)(이하 『기본계획』)과 『국회의원 기록관리 매뉴얼』(2020)(이하 『매뉴얼』)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매뉴얼』은 국회의원(실)의 기능과 업무, 생산기록유형을 정리해 각 국회의원실에 배포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록 기증을 유도하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헌법·국회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실)이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능을 산출해 이를 일종의 기능 출처(functional provenance)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발한 기능·업무와 생산기록유형을 기록 수집과 정리 업무에 활용하고 있지는 못하다. 수집정책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면담⁵⁾에서 기록연구관 A에 따르면 이러한 틀을 기록 수집·정리에 직접 활용하는 대신 소장 기록을 분석해 각 기능에 해당하는 기록의 비중을 파악하고 그 누락 현황을 분석하는 데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회의원(실)에서 위 매뉴얼에서 도출한 국회의원(실)의 고유기능과 업무의 틀대로 기록을 생산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있다. 따라서 기록 수집 이후 다시 이러한 틀에 맞게 분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초래될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은 기록을 수집하는 시기와 방식에 있다. 수집을 담당하는 사무관 B에 따르면 대수와 임기가 끝날 때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재당선에 실패한 국회의원(실) 전체를 일일이 방문해 기록 기증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의원과 그 보좌진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서 이삿짐센터에 짐을 처분할 때처럼 개인적으로 챙겨갈 필요가 없는 것들을 일괄 기증하는 사례가 많아 국회기록보존소는 이를 정책과는 상관없이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과 인력 부족 등을 원인으로 국회의원(실)으로부터 기록을 주는 대로 받아오다 보니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의정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 높은 기록의 비중이 작으며, 구체적인 맥락이 소거된 채 국회기록보존소에 입수된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컬렉션에 대한 기록관리자의 이해 부족을 초래하며 입법 과정의 어떤 단계에서 생산된 건지를 파악할 수 없게 한다. 이미 도출해 둔 국회의원의 고유한 기능과 업무를 제외하고 기록을 정리할 맥락이 거의 부재하기 때문이다. 기록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기록을 검색하거나 이용할 수 없고, 검색하고 이용할 수 없다면 기록을 수집했다라고 그 기록은 죽은 상태와 다름없다. 이에 더해 국회의원이 일단 재당선에 실패하면, 기록을 기증한 생산자인 국회의원 및 보좌진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환경도 하나의 문제다.

한편,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생산과 활용·보관의 주체인 보좌진은 여전히 기록 수집정책의 수면 아래에 있다. 기록연구관 A에 따르면 보좌진 활동은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록 출처나 생산자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손발이 되어 의정활동을 결정적으로 보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록을 생산하고 또 보관한다. 보좌진 기록은 의원실 내외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의사결과 그 결과를 담고 있는 증거(장연희, 윤은하, 2024)다. 이렇듯 기록의 주요한 출처에 해당하는 보좌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그 기록을 둘러싼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지역사무실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은 해당 선거구에서의 재당선을 목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국회의원과 지역구민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

5) 면담에서는 수집정책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기능분류 활용, 수집과정 전반, 지역사무실과 보좌진 출처 검토 여부 등의 문제를 다뤘다.

역구 기록이 주로 보관된 지역사무실 역시 주요한 출처이다. 그러나 국회기록보존소는 보좌진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실을 기록 출처이자 맥락의 요소로 거의 주목하지 못했다. 기록연구관 A에 따르면 지역사무실을 방문한 경험이나 어떤 기록이 생산되는지 기능할 기록 정보와 내용이 국회기록보존소에는 거의 부재하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재당선을 위해 지역구 관련 공약을 이행하거나 민원 활동을 수행한 내용을 포함하는 지역구 기록을 제대로 살펴볼지 못했다.

게다가 최근 국회는 전자문서를 생산하고 전자적 형태로 활용하는 문화가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 2004년 9월 국회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국회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전자기록의 양적 증가 흐름이 이어져 왔으며(정태영, 김유승, 2012). 앞으로 이러한 변화는 최근 국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탄소 중립 기조⁶⁾와 얽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본 디지털(born-digital) 형태로 많은 양의 기록이 생산·활용되고 있지만, 의원실에서는 이러한 전자문서들이 시스템을 통해 포착되지 못하고 각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개인의 외장 하드나 USB 등으로 분산 저장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만일 종이 기반 기록을 일체 기증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거나 보좌진의 외장 하드 등을 추가로 기증받지 않는다면 수집한 기록의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설령 외장 하드나 USB를 수집하더라도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이러한 매체에 담긴 전자기록의 등록·정리 작업은 국회기록보존소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사실이다. 이렇듯 전자기록 환경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가는데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이 기반 기록을 정리한 방식과 다른 별개의 접근법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기록보존소는 대국민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내부 구성원을 향한 서비스는 거의 미진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이 잘 정리되어 있고 전거레코드(authority records)나 가이드(research guide)와 같은 풍부한 검색 도구(finding aids)가 개발되어 기록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도구가 부재해 국민은 물론 내부 구성원 등 이용자들의 수요에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리해 보면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과 관련해 생산 맥락을 파악해 기록을 포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문화가 모두 부족하거나 충분치 않다. 법률 제정 등 실제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국회의원의 임기가 다할 때마다 이 기록을 사후에 수집하는 작업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풍부한 맥락을 축적해 기록을 정리하거나 기술·활용하는데 적용해 가기 위한 사례와 방법론이 필요하다.

2.2 기록 출처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전통적으로 기록 출처는 생산 부서나 기록을 이어받아 보유한 부서를 일컬었다. 과거에는 부서별로 기록을 묶어 정리하기만 해도 기록 생산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 과거 전통적으로 유럽의 기록학과 실무자들은 프랑스의 풍(fonds) 개념을 기록관리환경에 맞게 재해석해 독일의 경우 출처주의 원칙, 『네덜란드 매뉴얼』에서의 기록 컬렉션(archival collection), 영국 『기록업무편람』에서의 아카이브 그룹(archive group), 미국 레코드 그룹(record group) 등의 개념으로 수용·전유했다. 다만 출처주의가 기록학과 실무 현장에서 원칙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단일 조직이나 부서를 출처로 이해해 왔다(이재운, 2024).

문제는 현대의 조직이 더는 단일하고 완전하며 안정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데 있었다. 이미 호주에서는 1966년 Scott의 연구를 통해 단일한 출처가 아닌 조직의 복잡한 변천을 비롯한 다중 출처정보를 맥락 통제(context control) 영역으로 별도로 구조화하고 이를 레코드 시리즈(record series)라는 새로운 단위를 통해 기록과 연계시

6) 최근 2025년 6월 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중앙홀에서 탄소 중립 선언식을 개최하고 전자문서 활용도 증진을 비롯한 2035 로드맵을 발표했다.

키는 방식을 제안했다(Scott, 1966). Bearman 역시 이러한 접근법을 취하면서도, 조직보다는 ‘기능’을 출처로 식별할 것을 제안했다. 기능은 변동이 큰 조직 환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기록의 내용이나 중요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수가 유한할 뿐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단순하기 때문이다(Bearman & Lytle, 1985). 기록이 조직의 기능에 의해 정의된 활동의 산출물이므로, 이러한 ‘기능’은 그 자체로 기록 내용을 실제로 조사하거나 색인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기록을 지시할 수 있는 강력한 검색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출처에 대한 의미 있는 문헌은 Bearman과 Lytle(1985)의 오래된 연구를 꼽을 수 있다. Bearman은 출처와 출처주의가 활용되던 목적을 유연하게 이해하고 전자기록 시대에 적용했으며, 출처가 단일 조직 체계와 레코드 그룹 등으로 단순한 정리·기술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던 미국 기록학계를 비판하고 기능 출처와 전거(authorit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그 대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던진 핵심적인 물음은 기존의 계층적 도식이 현대 조직과 기록 생산 환경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실질적으로 유용한 가였다. 현대 조직의 특성에 맞지 않는 기존 기록학계의 단일 조직에 대한 관념, 단일 계층 체계에 대한 강박을 비판하고 출처 및 정리기술의 궁극적 목적, 즉 기록 검색을 강화하는 목적을 앞세워 출처를 기록 검색을 위한 접근점(access points)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earman과 Lytle(1985)은 기능을 출처의 중요 정보로 강화하고(기능 출처 개념) 다양한 전거⁷⁾를 개발해 기록 기술(description)과 구별하는 등 다양한 검색을 위한 접근점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접근점을 토대로 기록관리자는 기록 이용자의 요구에 적절한 추론을 통해 기록을 검색하고 서비스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때 논의된 추론 절차 혹은 추론 엔진(inference engine)(Bearman & Lytle, 1985) 개념은 주목할 만하다. Lytle은 출처를 검색 도구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추론이 기록관리자에게 주요한 기제로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이 추론 과정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Bearman과 Lytle(1985)의 아키비스트의 출처(기능)를 활용한 추론 과정

순서	단계	내용
1	접수 단계	주제 형태로 사용자에게 기록 정보에 관한 문의를 받는다.
2	추론 단계	어떤 기록이 이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
3		어떤 ‘기능’이 그러한 기록을 생산하는가?
4		해당 기능은 기관(조직)의 전체 역사에서 어느 시기에 분포하는가?
5	서비스 단계	가장 적합한 기록 단위(시리즈 등)를 찾는다.

Bearman과 Lytle(1985)이 제시한 추론의 다섯 단계는 물론 정부 기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선별해 출처로 상정한 경우이다. 당대 기록을 서비스하는 물리적 환경을 전제하고 있어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정리하거나 서비스하는 데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기록 출처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아키비스트가 기록을 찾아 서비스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기록의 위치를 추론하는 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 본 연구는 착안하고 있다. 또 기능과 함께 다양한 출처 맥락을 찾을 수 있다면 기록을 추론하는 다양한 통로를 아키비스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기록의 원질서나 출처와 같은 개념을 다루거나 기록 정리에 적용할 때, 실제 기록이 생산되는 환경이나 기록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실제 기록과 기록 생산자가 맺는 관계를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령 Meehan(2010)은 개인 기록을 정리할 때 기존 조직기록과 업무 분석에 초점을 둔 원질서와 출처 개념을

7) 같은 연구에 따르면 호주 언어학자 Scott(1966)에 의해 논의된 전거 제어(authority control) 개념이 Bearman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1985년 즉 20세기 말에 이르러서도 미국 기록학계에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았다는 지적은 흥미롭다. 전거를 일찍 도입한 도서관과 달리, 미국 기록학계에서는 여전히 기록의 검색 도구로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 기록학계의 경향에 관해 해당 연구(1985)를 참고.

그대로 개인 기록에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기록 간 맺고 있는 논리적 관계 혹은 생산자와의 관계가 무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기록 생산과 기록을 둘러싼 실제적 환경을 기반으로 출처나 원질서와 같은 개념은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출처 담론에 주목하는 이유는 앞서 논의했던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복합적인 성격에 비해 기존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과 그 맥락에 대한 접근이 한정적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국회 기록관리를 다뤄온 문헌들은 대개 국회의원 활동과 기록 생산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전에 조직이 통상적으로 기록을 생산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기록을 생산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과연 타당한지, 실제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생산 맥락을 밝혀주는지 고찰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의 대상을 행정기관(administrative body)⁸⁾의 통상적 업무 기능에 따라 생산된 기록으로 인식해온 기록학계의 관성이 자리하고 있다. 더 거슬러 오르면, 『네덜란드 매뉴얼』이나 『기록업무편람』과 같은 기록학 고전들이 그렇듯 전통적인 기록학이 기록관리 대상을 행정기관의 업무로 한정하고 이러한 명확한 기록 생산 주체를 출처나 원질서로 규정함으로써 근대 학문으로서 기초를 닦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기관(legislative body)과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어떨까? 호주 등지에서 행정기관의 일상적·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기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쓰인 닉스(DIRKS)와 같은 방법론을 입법기관과 그 구성원들의 입법 기록을 관리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기관과 국회의원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연구들은 대개 헌법과 국회법 등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권한이 곧 업무 단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 더욱이 단순히 통상적인 업무 단위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 의정활동을 바라보는 국회의원 개인의 관점, 재당선이라는 목적, 정당의 이해관계나 사회적 사건, 개인적 배경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이재윤 외, 2024)는 점을 미루어보면 국회의원의 정체성과 의정활동은 통상적인 업무기능과 구별되는 다소 복합적인 맥락을 가진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의회 제도를 제외하고는 내적인 규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정당, 동료 국회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정부와 유관단체 등 외부 요인의 협조와 요청도 빈번하다. 한편 국회의원은 단지 국회의원실에만 있지 않으며 지역사무실, 위원회 등 온갖 현장을 돌아다니며 각종 단체나 기관을 방문하는 등 지역구를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정무, 정책, 행정 등 의정활동 전체를 적절히 나눠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 보좌진에 의해 의정활동 기록은 각각 분산되어 생산·보관·활용된다. 이처럼 기록 생산은 행정기관 기록처럼 생산 단계에서부터 법적·기능적으로 설계된 시스템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곧 기록 생산에 국회의원 개인의 관여가 결정적이며, 법적인 근거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결정, 우연적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의정활동과 그 맥락으로 무엇을 선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학술적 판단에 따라 출처는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 기록 생산 현실과 밀접한 의정활동의 특정한 맥락을 선택해 기록을 수집·정리하고 기록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며 기록 검색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의정활동 기록의 맥락을 축적해 가는 것이 출처 규명 작업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출처 맥락을 넓은 범위에서 시론적으로 검토하고 중요한 출처 맥락의 유형을 구분해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8) 전자정부법에 의하면 행정기관(administrative agency)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뜻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국회사무처는 행정기관에 속한다.

2.3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출처 맥락 유형

현재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출처로 상정하는 출처는 크게 국회의원이라는 생산조직과 기능이다. 국회의원(실)이 담당하는 업무와 기능을 분석하고 이를 일종의 ‘기능 출처’로 인식함으로써 기록관리자가 기록을 수집·정리·기술·활용하거나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 대상으로 기록관리를 안내하고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해왔다. 국회의원의 기록관리 업무 참고용으로 배포한 『매뉴얼』에서는 어떤 기록 유형들이 주로 생산되는지 그 유형과 예시를 이와 같은 업무기능의 틀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위 『매뉴얼』을 비롯해 2016년에 수립한 『기본계획』의 업무기능분류를 분석하고 이러한 업무기능분류가 실제로 기록관리자가 기록을 수집·정리·기술·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용한지에 대한 검토하고자 한다. 그 후 이러한 기능분류 외에도 의정활동 기록의 생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맥락에는 무엇이 있는지, 각 출처 맥락의 특성과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 예시와 함께 탐구하고자 한다. 먼저 『매뉴얼』과 『기본계획』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능분류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2>).

<표 2> 국회의원(실) 기능분류

『국회의원 기록관리 기본계획』 (2016) 업무기능분류		『국회의원 기록관리 매뉴얼』 (2020) 업무·기능	
입법기능	법률안 제·개정	입법활동	법안발의
	예산심의		입법정책
	결산심의		연구개발
국정감독	청원·진정처리	국정감독활동	행정부건제
	국정감·조사		예산·결산
외교활동	대정부질의	기타활동	의원외교
	방문·초청외교		공개행사
공직선거참여	국제회의 참석		개인사/인물사
	정당선거·사무소관리		
	정당·선거지원		
	예비선거활동		
조직활동	본선거활동	정치활동	지역구 관리
	지역구관리		정당 업무
	후원회관리		언론 및 미디어 활동
일반행정	홍보		
	일정관리		
	회계관리		
	인사관리		
	기록관리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다루며 현실적인 요건을 비롯한 오랜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국회의 고유기능에 해당하는 입법, 예산 심의, 국정감시 및 견제, 의회외교 등을 그 기능으로 도출한 바 있다. 이에 지역구 관리나 선거, 정당 활동, 대외활동 등 기능을 추가해 이러한 틀로 기록을 검토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기본계획』에서 도출한 기능과 『매뉴얼』의 기능분류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기본계획』에서 ‘입법기능’에 속했던 ‘예·결산 심의’ 업무가 『매뉴얼』에서는 ‘국정감독활동’ 기능으로 재분류되었고 ‘공직선거참여’ 기능을 두었던 것과 다르게 『매뉴얼』에는 해당 기능이 빠져 있다. 또 『기본계획』에 ‘조직활동’ 기능에 포함되었던 ‘지역구 관리’, ‘홍보’ 업무는 『매뉴얼』에서 ‘정치활동’ 기능에 재분류되었으며, 그 안에 ‘정당 업무’가 신설되었다. 한편 ‘일반행정’ 기능으로 묶었던 일정관리, 회계관리 등의 업무는 『매뉴얼』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기능 및 업무 이동과 변화는 각 기능과 그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행정부

견제'라는 업무기능 역시 마찬가지다. 국정감독 기능이 단지 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에 그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바꿔 말하면 정책 평가 및 연구라는 관점에서 국정 감독이나 예산 심의는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을까? 말하자면 현재의 기능이 국회의원이라는 기록 생산자의 맥락, 즉 의미구조를 반영하고 있는가? 기록 생산자의 관점은 기록의 의미를 이해하는 중추 맥락으로 작용한다. 국회의원은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기에 앞서 끝없이 의미를 창출하는 자율적 개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듭 강조하자면, 국회기록보존소는 현재 이러한 기능분류 틀에 따라 기록을 수집하고 있지 않다. 기록 수집 환경이 앞서 언급했듯 열악할 뿐 아니라 국회의원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기록 생산이 이와 같은 기능분류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위의 기능분류만으로는 실제 수집했거나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이관받은 기록 집합 중 특정 기록이 국회의원 업무 과정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기록인지 역시 파악하기 어렵다. 가령 기록연구관 A에 따르면 의정활동의 단계나 입법 진행 절차 등에 따라 해당 기록이 초기 입안 단계에 생산되었는지, 심의하고 토론하는 단계에 해당하는지, 최종 단계의 기록인지 알 수 없다.

사후 수집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본 연구는 위의 문제의식에 천착해 '생산 단계에서의 통제'라는 기존 방식 대신 사후적 수집이라는 현실에 따라 업무 과정, 혹은 의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하나의 맥락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기록관리자가 이용자의 요구로부터 기록을 찾는데 추론할 수 있는 맥락을 출처로 이해할 때, 위에서 A 연구관이 주목한 정책의 입안 단계, 의사결정 과정, 최종 문건이라는 업무의 순서(단계)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기능적 맥락과 함께 순차적 맥락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주요 출처 맥락으로 다룬다. 순차적 맥락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입안, 의사결정 과정, 최종의 단계는 물론 정책 평가, 시정 요구, 대안 제시 단계 같은 형태로도 규정될 수 있다. 이번에는 순차적 맥락을 포착하는 다양한 방식 중 의회의 중요 가치인 심의 혹은 속의 과정을 실현하는 단계에 착안하고자 한다.

이재윤 외(2024)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사례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먼저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자료요구권을 통해 공공 사안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고 의견을 다듬어 정부 기관에 질의하거나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른 의원 및 정부 요인 등과 협의·숙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는 청문회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질의와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심문 과정이 포함된다.) 그 후 위원회 (혹은 의회) 차원에서 법률을 심사·의결하거나 정책을 결정·시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간략히 요약하면 ①자료요구, ②분석, ③질의와 토의, ④입법·정책 순이 된다. 한편 예산 심의과정은 자료에 해당하는 예산안에서 시작해 예산요구, 정책질의, 심의 등 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순차적인 맥락은 실제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속의 과정을 가시화할 뿐 아니라 실제 업무 과정을 해당 단계에 생산된 기록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출처 맥락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물론 더욱 구체적인 업무 등을 적합한 용어로 종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을 기록 수집 및 정리·기술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을 기록의 정리·기술에 적용할 방안에 대해서는 Bearman과 Lytle(1985)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Bearman과 Lytle은 출처로서 '기능'과 함께 기록의 '형태'(form)에도 주목했다. 기록의 형태는 해당 기록이 만들어질 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형이나 형태 자체가 이러한 배경을 포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가령 자료요구서나 질의서, 요구자료, 의안과 같이 의회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기록의 형태(혹은 유형)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순차적인 맥락의 경우 주로 국회의원의 원내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속의·심의의 중요 가치로 삼는 원내활동과는 성질이 다른 지역구 등 원외 활동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출처 맥락의 다른 하나로 연대기적 맥락을 들 수 있다. 이는 순차 맥락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한 대수가 아닌 여러 대수에 걸쳐 의정활동을 벌인 국회의원에 해당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재당선

및 낙선 등의 과정을 거쳐 의정활동을 수행해 가며, 설령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시기일지라도 정당(당직자), 대외 활동 등을 통해 지역구민의 신뢰도나 정책적 전문성을 축적해 간다. 이런 경우 기존 국회의 고유기능 및 분류가 해당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이해하는 주요 맥락을 제공함에도 단독으로는 해당 기록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때 기록관리자는 연대기적 혹은 생애사·개인사적 맥락을 탐구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생애사적 맥락은 의정활동 전후 시기의 기록을 정리하는 데 유용하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연대기적 맥락은 국회의원과 보좌진들 사이에서 기록을 정리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다. 가령 18대에 이어, 19대, 20대에 이르는 의정활동을 수행한 3선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 기록은 일반적으로 보좌진들의 폴더에 대수나 연도에 따라서, 개원(6월) 후 정기회(9월), 국정감사(10월), 예산 심의(11월) 등 국회 일정에 따라서 축적된다. 이렇듯 연대기적 맥락은 보좌진 등 실제 기록 생산·보관자들의 정리 방식과 흡사한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록의 생산뿐 아니라 보관 이력을 출처 맥락으로 다룰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기록이 생산된 순간뿐 아니라 생산이 종료된 이후 어디서 어떻게, 또 누구에 의해 보관됐는지 그 경로에 대한 정보는 실제 기록을 수집하거나 정리할 때 매우 핵심적이며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은 기록 소장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밝힐 수 있다. 주요한 의정활동 기록 소장처는 국회의원의 자택이나 지역사무실, 국회의원실, 특히 보좌진들의 개인 외장 하드 등을 들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주요 출처 유형을 표로 도식화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

<표 3>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주요 출처 맥락 유형

출처 맥락	예시	범위	특성
기능적 맥락	입법, 정책연구, 국정감사, 정당·정치활동 등	원내, 원외활동	비교적 변동 없는 고유기능에 따라 기록 정리, 단 기록을 수집·정리·기술하는데 활용할 방안 논의 필요
순차적 맥락	자료요구, 분석, 질의, 의안 등	원내활동	의회에서의 숙의 과정을 가시화, 의정활동 과정을 통해 각 단계에서 생산된 기록을 이해할 수 있음
연대기적 맥락	대수, 연도, 국회 일정이나 생애사	원내, 원외활동, 의정활동 전후 시기	실제 기록이 쌓이는 방식과 흡사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개인사(생애사)적 맥락을 적용해 기록의 이해를 폭넓게 함.
보관 이력	자택, 지역사무실, 보좌진 등	원내, 원외활동, 의정활동 전후 시기	기록이 실제 생산·보관되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록을 수집, 정리·기술하는데 유용함.

2.4 우원식 컬렉션의 주요 출처 및 특징

2.4.1 우원식 컬렉션 개요

우원식은 1995년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의원에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노원구를 중심으로 지역 활동, 환경운동을 이어갔다. 이후 2004년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지역·환경운동을 기반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자원해 주로 활동했으며, 세목 교환 등 서울지역 불균형 해소방안을 모색한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학창시절 민주화운동 기억을 공유하는 세대를 기반으로 아침이슬모임 등을 결성해 활동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는 비정규직 관련 3법⁹⁾을 위한

9)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입법으로 이끌었고, 현장조사·공청회를 주도하는 등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소속임에도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를 개최해 협상 과정의 진실을 밝히고 미군기지 반환과정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한국 정부의 협상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섬진강, 금강 등 5대강을 그 수원지부터 하류 지까지 직접 걸으며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하천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프로젝트인 ‘우리강 도보 순례’를 진행해 강 생태계에 관한 환경정책을 고민하고 향후 ‘물 관리 일원화’라는 의제를 도출하기도 했다.

18대 국회의원에는 낙선했으나 정당 활동을 이어갔으며, 19대 국회에 재입성했다.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 당시 을(乙)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이를 입법으로 이어낸다는 취지의 을지로위원회를 민주당 최고위원회 산하에 신설해 초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사회문제로 불거진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사태 등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관행 및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가 발생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사 간 갈등을 직접 조정하는 한편, 여러 차례 유의미한 합의를 끌어내고 이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내용을 입법으로 이어내는 활동을 수행했다. 한편 당시 연달아 일어난 사회적 재난에 대응해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참사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세월호참사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슴기참사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진상규명과 유가족 보상 대책 등을 마련했다.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 민생, 정부는 물론 야당과의 협치 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를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했다. 또한, 당시 에너지 민영화, 위협의 외주화 등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및 안전문제를 공론화하고 故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당·정 간 이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참여하는 등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21대 국회의원 시기에는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자격으로 홍범도 유해를 국내로 봉환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방류저지 TF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처럼 우원식은 평화민주당부터 더불어민주당까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민주 계열 정당 소속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수석사무부총장, 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등 당의 중책을 두루 맡아 정당의 역사와 조응하는 면이 있다. 한편 노원구 지역 활동 등 지역 정치를 시작으로 서울시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장 등 중앙 정치로 점차 정치적 경험과 식견을 쌓아온 사례인 만큼 기록 사례로서 유의미하다고 보았다.

2024년 7월 국회의장실 전담으로는 최초로 기록비서관이 임명되었다. 이후 국회기록원 설립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선제적 사례로 우원식 의정활동 기록 컬렉션을 연구하기 위한 기록연구팀이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 기록연구팀의 목적은 국회기록원 설립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장기적이고 학술적인 관점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속성과 효용을 탐색하며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수집 및 정리기술을 위한 체계(model)를 연구하는 데에 있었다. 국회기록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발주와 함께 우원식 의정활동 기록 컬렉션을 정의하고 그 생산 맥락을 연구하는 것이 우원식 컬렉션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의정활동 기록 연구에는 국회의원 개인은 물론 의정활동 기록을 이해하는 역량과 의회 조직 및 기능에 대한 기록관리자의 이해도가 상당한 비중으로 작용하며, 결국, 무엇을 기록화할 것인가 어떤 맥락을 활용해 정리하고 이를 기술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관리자의 가치 판단이 개입한다. 인물과 그 저작,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종합연보 작성, 정당사 연구,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관련 이론적 검토 등 생산 맥락에 관한 연구를 사전에 수행한 것은 그 때문이다.

다만 당시 우원식은(현재까지도) 국회의장을 역임하는 중이었고 22대 국회의원 임기도 아직 다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즉 기록연구팀은 우원식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록을 수집·정리해야 했다. 기록연구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집범위를 국회의장 임기 이전까지의 의정활동 시기에 생산된 기록 중 비현용 기록을 수집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회의장 시기나 의정활동 시기가 아닌 시기에 생산된 기록 중에도 의정활동의

맥락을 제공한다면 수집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기록보존소는 기록물 수집과 관련한 조직의 최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의정활동과의 관련성, 국회 및 정당 관련 활동을 수집범위와 기준으로 좁히기를 권장했다. 기록연구팀은 이러한 의견을 참작하면서도 기존 선행연구(김장환, 2018; 한은정, 임진희, 2009)에서 지적하는바, 의정활동의 전후 맥락을 알려주는 ‘헌정 자료’를 비롯한 국회의원 개인사 기록, 지역구 기록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수집정책을 개발했다. 이는 향후 국회도서관, 국회박물관 등의 수집 기능이 국회기록원으로 통합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기도 하다. <표 4>는 우원식 컬렉션 수집정책의 주요 예시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4> 우원식 컬렉션 수집정책의 주요 항목 예시

수집범위(수집단위)
<p>수집범위는 내용과 시기,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p> <p>먼저, 시기는 학생 민주화운동과 정계 입문 시기(1979~2003), 국회의원 활동 시기(2004~2024), 국회의장 재임 시기(2024~2026)를 포괄한다. 단 위 시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원식의 의정활동을 이해하는 주요한 맥락을 제공한다면 수집하고, 전시 활용 등의 쓰임이 있다면 수집한다.</p> <p>내용으로는 우원식의 사회적 현안이나 의제, 관심 분야에 관한 관점과 개성을 드러내거나 지역구민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 중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 소속기관에 접수·관리되는 기록을 제외한 모든 기록을 수집한다. 특히 대표적인 의정활동, 즉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원내활동, 지역구나 선거 유세 및 연설,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한 정당 활동 등을 포괄하는 의회·정치 활동을 담고 있는 기록을 수집한다.</p> <p>유형으로는 시청각기록을 비롯한 전자기록 및 실물 기록을 모두 포괄해 수집한다.</p>
주요 출처
<p>우원식 컬렉션은 주로 우원식의 자택과 지역사무실, 국회의원실 등에 소장·보관되고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보좌관, 비서관, 아내 등 관계자들이 생산·보관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의 활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특성상 보좌진들 또한 주요한 출처가 된다.</p>
우선 수집대상(선별·반환 기준)
<p>현재 국회의원 임기를 다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원식의 자택과 지역사무실에 소장되어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주거나 의정활동의 맥락을 보여주는 기록 중 비현용 단계로 판단되는 기록을 우선 수집한다. 보좌진 보유 기록의 경우 오랫동안 국회의원과 의정활동을 수행해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간주하는 순서로 우선 대상을 삼으며, 마찬가지로 비현용 단계로 판단되는 기록을 우선 수집한다. 그 외 의정활동과의 관련성, 보존상태, 기록의 유일성, 생산 시기 등 우선순위를 따져 수집하되, 개인 아카이브 및 생애사 관점을 고려해 우원식과 관계자 기록을 포괄적으로 수집한다.</p> <p>단 의정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록이나 기록적 가치가 떨어지는 기록의 경우 이를 반환한다.</p>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해당 의원의 초기 공적인 활동이나 캠페인, 찾아 읽거나 소장했던 도서·간행물, 관심사는 의정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물며 수집 시점에서 기록관리자가 의정활동의 맥락을 식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추가로 수집된 다른 기록에 의해 맥락이 드러나거나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인물 아카이브에서는 일반적으로 인물의 공직 시기에 활동한 기록뿐 아니라 공직 활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후 시기에 생산된 기록, 나아가 개인을 이해하기 위한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기록까지를 그 수집한다. 결국, 기록 그 자체보다는 기록 생산자와 그 활동에 대한 맥락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개인 기록은 그 생산을 관장하는 법적인 근거나 기준이 없으며, 개인의 특성과 내·외적 환경이 작용한다(오명진, 2017)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기록연구팀은 의도적으로 인물 기록과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뿐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친 개인적 배경 등 외부 요소에 관한 기록까지를 의정활동의 관점으로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기록연구팀은 이렇게 2025년 초 우원식 컬렉션에 관한 수집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수집 작업에 착수했다. 수집정책에 따라 잠재소장처를 크게 의원 자택과 지역사무실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수집 절차에 따라 각 단계를 기록화하며 업무를 진행했다. 자택에 이어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기록 생산 및 소장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을 수집했다. 지역사무실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C 비서관을 면담해 지역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과 만들어 지는 기록의 현황 등을 조사했다. 장주영(2016)은 A 의원의 기록을 기록화하기 위해 약력 조사, 기록화 영역 구분, 출처 조사, 현황파악을 포함하는 예비단계, 기록화 전략(정책)과 분류체계 수립을 포함하는 입안 단계, 이를 실행하는 실행단계, 평가를 포함하는 환류 단계로 구분했는데, 본 연구는 수집 체계를 정리 체계와 나누고 수집 체계에 해당하는 구체적 절차를 아래(<표 5>)와 같이 도출했다.

<표 5> 우원식 컬렉션 수집 체계

체계	단계	내용	산출 문서
수집 체계	준비 단계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주요 자료조사 및 연구	-
		자료에 기반한 행적 선별해 연보(어록) 정리	종합연보
		수집에 필요한 정책 및 양식 개발	수집정책 및 각종 양식
		기록 소장처(출처) 사전 조사 및 수집계획	소장처별 리드 파일
	기록 수집단계	소장처 방문 및 현황 조사	소장처별 케이스파일
		보관·작업공간 확보 및 기록 수집	-
		가 목록(건식별) 작성	소장처별 가 목록 및 임시상자 목록

2.4.2 자택, 지역사무실, 보좌진: 주요 출처와 그 특징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출처로 기록연구팀이 우선 주목한 곳은 자택이었다. 개인 자택은 한 개인의 일생동안 생산된 기록이 보관되는 장소다. 국회의원 역시 예외는 아니다. 리드 파일에 작성한 소장 이력에 따르면, 학생·민주화운동 시절에 수배와 구속 등으로 본가에 있던 우원식 기록은 둘째 누나(우난혜)의 자택에 따로 보관되다가 1988년 6월 우원식이 분가한 뒤로 그곳으로 옮겨졌다. 이후 2002년 5월 최종으로 자리 잡은 현재 자택(하계동)에 약 23년간 보관되었다. 따라서 자택에 보관한 기록의 생산 시기는 1970년대부터 최근 2020년대에까지 걸쳐 있으며, 주로 서재와 방, 거실 수납장 등에 도서, 테이프, 박물, 사진, 서신이나 문서, 사진 앨범 등 다양한 기록 유형이 보관되어 있었다.

자택 다음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출처로 꼽은 곳은 지역사무실이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사무실은 국회의원실 다음으로 의정활동의 또 다른 기반이자, 재당선을 위해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장소이다. 지역구 행사 및 의정 홍보 활동, 선거 활동, 정당 지역위원회 활동, 민원 활동 등이 이루어지며 우원식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2004년부터 국회의원 재임 기간 꾸준히 축적된 지역구 활동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2004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때부터 노원구 곳곳을 옮겨가며 현재 위치에 이르기까지 12년간 6차례 이사하긴 했지만, 현장민원실과 같은 지역구 활동들, 각종 기관 방문, 새해나 명절마다 개최하는 주기적인 행사, 가령 지역 노인정 방문, 지역산악회, 해맞이 여행, 출퇴근 인사, 명함 등에 관한 문서나 사진을 담당 지역사무실 보좌진들이 보유하거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자택, 지역사무실 두 출처 기록을 정리한 결과 출처별로는 지역사무실 기록이 34%, 자택 기록이 66%의 비중을 차지했다. 형태별로는 문서류(45%)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도서간행물류(31%), 음성영상류(10%), 사진류, 박물류, 의정홍보물류 순이었다. 시기별로는 학생운동·수감 시절(23%)이 역시 제일 많았고, 그 뒤로 17대 국회(20%), 결혼·평화민주당 시기에 생산된 기록(13%), 21대·22대(11%), 국회 보좌진·서울시의원(10%) 순이었고 19대, 20대 국회에 생산된 기록은 각각 3%였다. 현황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자택에 보관된, 오래된 수감 시절 도서의 비중이 높으며, 지역사무실 기록을 통해 17대 국회 기록이 보강되기는 했어도 여전히 19대, 20대, 21대 등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진행한 시기에 생산된 기록 비중이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록연구팀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하며 기록을 생산·보관하는 보좌진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주요 출처로 주목하게 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실제 기록을 만들고 보관하며 이용하는 주요한 주체는 주로 보좌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좌진 기록을 제외한다면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전체 양상은 물론 실제 기록이 어떤 방식과 질서로 생산되고 보관되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이에 기록연구팀은 국회의원 보좌진 활동을 ‘의정 보좌활동’으로 명명하고 보좌진 기록 가이드를 제작해 보좌진 기록에 대한 개요, 권장 사항, 수집대상의 구체적인 예시 등을 작성해 보좌진의 기록 선별에 참고하게끔 했다. 그 외 리드 파일에 해당하는 맥락을 써넣을 수 있는 양식(보좌한 기간·기간별 직책·주요 역할(업무)과 내용·보관하고 있는 주요 기록·기록보관이력·비고)을 함께 만들었다¹⁰⁾. <표 6>은 그에 대한 예시이다.

<표 6> 보좌진 기록 가이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장실 기록연구팀은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의정활동 기록을 자택, 지역사무실, 국회의원실(※의장실 제외) 등의 주요 기록 출처를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이 보좌진분들의 노고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보좌진분들의 의정 보좌활동이 담긴 기록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나아가 의회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가는 데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 보관하고 계신 의정 보좌활동 기록을 아래의 양식과 함께 국회의장실 기록연구팀에 양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장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의 경우 가능한 한 별도 선별 작업 없이 기록을 제작할 당시 분류해 놓은 파일링 방식을 알아볼 수 있게 기증하고자 하는, PC나 외장 하드(※스마트폰 제외)에 저장된 폴더 전체를 양도해 주시는 것이 기록 정리에 수월합니다(사본 양도 권장).
수집대상의 구체적인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실 및 지역사무실에서 의정활동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 및 협조·요청문 - 을지로위원회 등 정당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 주체들과의 활동·관계를 드러내는 합의문·녹취록·사진 등의 기록 - 국회의원의 입법·외교·국정감·조사·예산 편성을 비롯해 갈등 조정, 사회적 여론 수렴 및 합의 유도 등 정치 활동을 드러내는 기록 - 질의서 등 의정사 및 의회·의원의 기능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의정활동 기록 - 의원과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민원, 지역구 정책·공약 추진 사항을 드러내는 기록 - 원내대표 등 정당의 주요 고위 직책을 수행하며 추진한 성과와 관련된 기록(교섭단체 간 합의문 등)

기록연구팀은 이에 따라 17대부터 우원식의 보좌진으로 오랫동안 활동했으며 국회의원실과 지역사무실을 오가며 업무를 총괄한 보좌진 D의 외장 하드를 수집했다. 외장 하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도출되었다. 먼저, 외장 하드엔 보좌진 D가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재직한 기간인 17대, 19대, 20대 시기 생산한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 크게 ‘국회지역자료’와 ‘개인자료’라는 범주로 묶여 있었다. 이때 ‘국회지역자료’는 국회와 지역사무실에서 생산된 기록을 포괄한다는 의미다. 하위 수준으로는 국회 대수를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 외 탈핵국회의원모임, 원내대표, 국정감사·조사, 더불어민주당, 민평련, 흥범도장군기념사업회, 지역자료 등 주요 활동들은 별도의 폴더로 보관되어 있었다.

보좌진 D의 외장 하드에는 보좌진 D가 국회의원실은 물론 지역구까지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자택이나 지역사무실에 보관된 기록에 비해 의정활동 시기에 생산된 원내활동 기록(국정감·조사), 각종 지역구 행사 및 활동, 지역구 공약 사업, 민원기록을 포함하는 지역구 기록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포함), 원내대표 활동기록 등 정당 관련 기록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정당의 중책을 맡은 국회의원 보좌진이 단지 의정활동뿐 아니라 정당 활동기록의 주요 출처이자 소장처 역시 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기록연구팀이 자택과

10) 이 가이드를 실제로 보좌진에게 배포하지는 못했다. 내부자를 통해 보좌진의 외장 하드를 수집했기 때문이다. 보좌진 기록을 수집할 때 해당 보좌진이 국회의원과 함께 한 시기과 시기별 역할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보좌진 기록에 관해서 이러한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무실 내부 의원실, 보좌진 D 외장 하드에 보관된 기록을 수집·정리한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표 7>)과 같다.

<표 7> 우원식 컬렉션의 출처별 기록 수량 및 특징

소장처	의원 자택	지역사무실	보좌진 D 외장 하드
소장처와 기록 생산자와의 관계	의원 개인의 일생동안 생산된 기록 보관된 장소	지역구 행사, 의정 홍보 선거 및 지역위원회 활동 등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장소.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보좌진의 의정보좌활동 기록이 보관된 매체
소장 기록 시기	1970년대부터 2020년대에 걸쳐 있음. 특히 의정활동 이전 기록들이 다수	의정활동 시기인 2004년부터 2020년대에 걸쳐있음, 17대 국회의원 시기 기록 다수	해당 보좌진이 의원을 보좌한 시기인 17대·19대·20대 국회 시기에 걸쳐 있음
수량(25.07.30 기준)	건(item) 1736 파일(file) 28 시리즈(series) 10 하위 시리즈(sub-series) 37	건 1159 파일 44 시리즈 6 하위 시리즈 29	건 1800(수집 진행 중)
소장 기록 유형	도서·간행물 45% 문서류 31% 그 외 VHS, 카세트테이프, DVD 등 음성영상류, 사진앨범류, 의정홍보물류 등	문서류 45% 도서간행물 31% 그 외 VHS, CD, DVD, 베타캠이나 미니 DV 등 음성영상류, 사진류, 상패 등 박물류, 의정홍보물류 등	문서류(전자문서) 위주, 그 외 사진류, 음성영상류 등
소장 기록 특징	오래되고 산화되어 보존처리가 필요한 기록 존재, 학생운동 및 수감 시기의 기록 비중이 높고 가족들 기록도 있음. 다만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기록 부족	국회의원 재임기간 기록 중 17대 시기 기록 비중이 높음. 국회의원실 기록과 지역구에서 생산한 기록이 혼재되어 있음. 그 외 의정활동 시기 기록 부족	전자기록. 의원실과 지역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의정활동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보좌진이 맡는 역할이나 시기에 따라 기록과 그 특성이 달라질. 단 외장 하드의 경우 관리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표 7>에 서술한 바와 같이 의원 개인 기록이 대다수인 자택에 비해 지역사무실과 보좌진 D의 외장 하드엔 의정활동 시기에 생산된 기록이 다수 있었다. 특히, 보좌진 D의 경우 국회의원실 업무는 물론 지역사무실 업무까지 총괄했기 때문에, 그의 외장 하드엔 국회의원실 기록은 물론 지역구 활동에 관한 기록도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지역사무실에도 국회의원실에서 생산한 지역구 관련 보도자료나 각종 공문 등이 섞여 있기도 했다. 이는 우원식 의원과 그 보좌진이 지역구 공약을 이행하거나 지역과 관련된 민원을 의회 내 공식 업무와 중첩해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생산과 보관(소장) 자(처)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출처 관계를 드러낸다.

홍주현(2019, 186)은 단지 정치에 한정해 바라볼 뿐 실질적으로 보좌진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입법기관을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러한 현상은 시민사회는 물론 언론 보도 등에서 만연하다. 이로 인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질 높은 활동 수행보다는 자극적·극단화되거나 정쟁 요소가 큰 사안이 주목받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아카이브 역시 다르지 않다.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 지에는 이러한 입법기관의 의정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체계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현실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국회기록보존소는 이러한 심층적인 현실에는 가닿지 못했다. 궁극적으로 국회와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에는 이러한 현실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또 구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보좌진의 의정 보좌활동과 그 기록에 주목한 이유이다.

한편 보좌진 기록은 보좌진 개인의 외장 하드에 보관된 만큼 다음과 같은 특징도 있다. 첫째, 개인적인 혹은 민감한 기록이 혼재되어 있다. 가령 보좌진 개인의 자료들이나 정당 조직 및 당원 명부 등 개인정보, 혹은 회계나 내부 전략, 대외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을 수집할 때는 기증자와 인제자가 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며, 기록관리 전반에 걸쳐 내부적 이해관계를 참작하고 보좌진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이후 기록에 대한 보안이나 관리에 대한 세심한 관심, 후속 조치, 활용 시 조건과 권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좌진 기록은 전자기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자택이나 지역사무실 보관 기록과는 또 다른 특성이며, 대개 최종 결재 이전 문서들도 많고, 사본·원본의 구별이 없으며 정리 방식이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아날로그 기록을 수집·정리·기술하는 방안과는 다른 별도의 방식이 요구된다. 전자기록에는 물리적인 형태나 배열 대신 논리적 관계나 구조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기록과 함께 보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원질서를 연구한 zhang(2012)은 디지털 기록을 정리할 때 외장 하드가 임시 저장 공간이자 아키비스트가 정리 작업을 수행하는 처리 영역이며, 원래의 폴더-파일 구조 및 제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일 그 구조가 체계적이지 않으면 생산자 또는 생산기관에 대한 지식과 수집·이관된 기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록의 내부 구조를 재정립(zhang, 2012)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보좌진을 둘러싼 현실은 의원실마다 매우 다양하며 변화무쌍하다. 자택, 지역사무실과 함께 보좌진을 주요 출처로 상정한 이유는, 실질적인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소장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꼼꼼하게 보좌진의 의정 보좌활동의 역사를 탐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원식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오랫동안 의정활동 초반부터 함께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총괄해온 보좌진들이 있었고, 따라서 이들이 소장한 기록도 광범위하며 풍부하다. 이렇듯 보좌진의 이력 및 의정 보좌활동은 언제든 그들의 신분 변동, 의원실 문화 등으로 인한 변화무쌍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러한 변동성은 지속적·일관적인 기록관리에 큰 장애 요소인 점은 분명하다.

3.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정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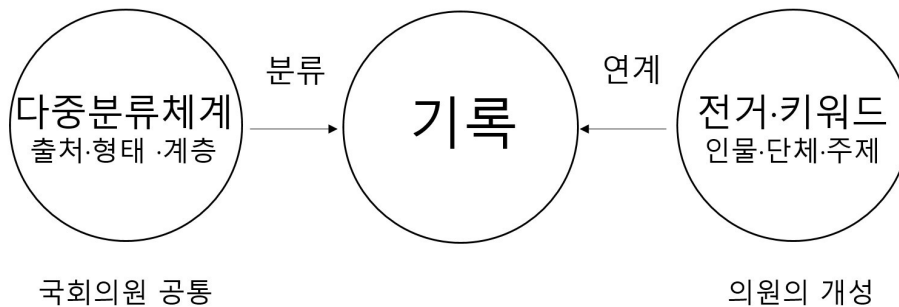
앞 장에서 논의한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출처 맥락, 즉 기능, 순차, 연대기, 보관 이력은 기록을 최초 수집하거나 수집하기 위해 잠재소장처를 조사하는 단계에서부터 기록을 정리(분류)하고 기술과 전거를 통해 맥락을 보완해 가는 전 과정에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단적으로 우원식 컬렉션은 소장 이력에 따라 하위 컬렉션으로 구분되어 정리되었다. 자택에 보관되던 기록은 의정활동 전후 시기 기록이 다수인 만큼 개인사적·연대기적 맥락에 기반해 기록 시리즈(또는 하위 시리즈)를 도출하고 계층별로 맥락을 기술했다. 지역사무실 기록에는 의정활동 시기 기록이 주인 만큼 연대기적 맥락과 기능 맥락을 혼용해 정리·기술에 활용했다. 가령 국회 대수와 같은 연대기적 맥락과 함께 입법·국정 감독·정치·정당 활동 같은 국회의원의 기능 맥락을 시리즈(또는 하위 시리즈) 등 상위 계층을 도출하는 데 적용했다. 한편 문서의 형태분류를 질의서 등으로 세분화해 의정활동의 순차적 맥락을 가시화하고자 했다. 다음(<표 8>)은 기록연구팀이 수립한 우원식 컬렉션의 정리·기술 체계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8> 우원식 컬렉션 정리·기술 체계

체계	단계	내용	산출 문서
정리 체계	정리·기술 단계	기록 정리 및 접근에 필요한 다중분류체계 개발	형태분류표 등
		기록 계층별 정리 및 조직화 *컬렉션-시리즈-파일-아이템 구조 활용	정리 계층 표
		계층별·형태별 기술요소 도출 *국제기록기술규칙(ISAD(G)) 참조	기술요소 표
		계층별 기록 정보(맥락) 조사와 기술	계층 및 건 기술표 (DB), 구술기록
		전자·키워드 도출 및 기록 연계	

이용자가 기록에 다양한 통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록연구팀은 형태분류, 계층분류 등을 동시에 활용했으며, 기록 계층을 활용해 컬렉션과 시리즈 등 상위 단위에서 파일, 아이템 등 하위 구조까지 활용해 기록을 조직화했다. 특히 기술 단계에서 기술할 항목은 국제기록기술규칙인 ISAD(G)를 준용한 자체 기술요소를 도출한 뒤 전거 및 키워드를 도출해 이를 기록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정리·기술 체계를 확립했다.

한편, 의정활동 기록의 정리기술 전략을 기록연구팀은 다음과 같이 수립했다. 먼저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에 해당하는 소장처(출처)별, 형태별, 계층별 다중분류체계를 개발해 기록을 분류한다. 이와 동시에 전거·키워드를 선별해 의정활동 기록과 연계한다. 이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에 범용해 쓰일 분류체계를 개발해 다른 국회의원 기록에도 원활히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전거와 키워드를 통해 공통된 맥락을 추적하며 국회의원 개별의 개성과 관점을 통해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다중분류체계와 전거·키워드 정보는 추후 패시(facet)이나 태그(tag) 기능을 통해서도 구현할 수 있다. <그림 1>은 이러한 전략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우원식 컬렉션 정리·기술 전략

3.1 생애사적 맥락과 기능분류의 혼용

기록연구팀은 자택, 지역사무실 기록을 순차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특히 개인 자택과 지역사무실 기록에는 기존에 기록을 생산하는 과정에 부여한 질서를 찾기 어려웠고 그 정리도 체계적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록을 재정리해야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소장처별 특징과 이에 기반한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준거가 무엇인지 고민했다. 앞서 논의했지만, 자택 기록의 경우 본격적인 의정활동 시기 생산된 기록 이라기보다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친 학생운동·민주화운동 시기, 국회의원 보좌진 및 서울시의원 등 정계에 입문한 시절, 지역 활동과 환경운동 등 공공 현안에 관한 경험을 쌓아가던 시기의 기록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정 기록 집합을 구분하고 그 출처 맥락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원식의 생애 활동, 그중에서도 특정 시기의 활동을 탐구해야 했고 자연스럽게 우원식의 연대기(생애사)적 맥락이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맥락을 확보하기 위해 기록연구팀은 개인의 저작이나 국회회의록, 언론 등을 검토해 종합연보를 작성하고, 연보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결락된 맥락을 보완하기 위해 우원식을 대상으로 구술면담을 진행했다. 구술의 범위는 공식 회의록, 언론 등에 다뤄지지 않은 시기, 특히 의정활동 이전 학생운동·민주화운동 시기, 수감생활, 노동운동, 지역 활동·환경운동 시기에 집중되었다. 구체적으로 백지 유인물 사건과 무악골 대첩 등 연이은 연세대 학생시위, 전역 이후 민주화운동과 수감생활, 서점 운영, 평화민주당 당직 생활과 『인권백서』 편찬, 임채정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과 환경운동의 시작, 현장정치 구호를 비롯한 을지로위원회 등을 다루었다. 이러한 맥락은 기록을 이해할 뿐 아니라 정리하거나 계층 단위를 기술할 때도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

<표 9> 연대기(생애사)적 맥락을 활용한 자택 기록 정리 예시

시리즈	서브 시리즈
대학교 입학 이전(~1975)	
학생운동 및 수감 시기(1976~1983)	학생운동(1976~1980) 수감생활(1981~1983)
결혼, 노동운동(1984~1987)	
정계 입문기: 평민당 및 평민연(1988~1992)	평화민주당·평화민주통일연구회 인권실태조사 및 각종 단체 활동 신민당·서울시의원 출마
국회의원 보좌진 및 서울시의원(1992~1998)	임채정 국회의원 보좌진 서울시의원
도약기: 환경관리공단(1999~2003)	김한 자료조사 및 독립유공자 신청 환경 관련 환경관리공단 정당·정치 활동

위의 표(<표 9>)는 자택 기록을 우원식의 생애사적 맥락을 활용해 정리한 예시이다. 인물 연구 및 구술면담을 통해 확보한 생애사적 맥락을 기록 시리즈 단위로 구성해 실제 자택에 보관된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자택 소장 기록을 건으로 식별하는 과정에서, 본래 기록이 정리되어 있던 물리적 배열·배치 상태에 따라 귀납적으로 파일 등 하위 단위를 도출하고 이를 시리즈 단위와 연계해 우원식의 생애사적 맥락이 그대로 해당 기록의 생산 맥락으로 작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생애사적 맥락은 단지 기록의 정리 작업에 반영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리즈의 '범위와 내용' 항목 등 기록 계층 단위를 기술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다음(<표 10>)은 각 시리즈 단위의 기술요소 중 범위와 내용 항목을 표의 형태로 정리해 본 것이다.

<표 10> 연대기(생애사)적 맥락을 활용한 자택 기록 기술 예시

기술 단위	범위와 내용
정계 입문기: 평화민주당 및 평민연(1988~1991)	우원식은 87년 대선을 기점으로 '김대중 대통령 후보 추대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의 길로 들어섰다. 김대중 후보가 선거에서 패한 뒤 그를 돕고자 하는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재야 세력 98명과 뜻을 모아 평화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적 공민정당'을 만들자는 구호 아래 평화민주당에서 인권위원회 민권 부국장을 비롯한 당직 활동을 이어가면서 당내 재야 세력 모인 평화민주통일연구회 총무국장으로 1992년 10월까지 활동했다. 전국에서 발생한 인권 탄압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 작성, 편집하는 등 『인권백서』(1990) 발간을 주도했다. 당시 정당에서 일하는 우원식 등 청년활동가들은 평시에 상주하기보다 선거 때 일시적으로 모이는 무임금 노동이었는데, 국회의원의 월급을 나눌 것을 제안해 당직자 월급제 체계의 시작을 열기도 했다(우원식 구술 참고). 우원식은 1991년에 노원구에서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국회의원 보좌진 및 서울시의원(1992~1998)	우원식은 국회의원 임채정의 보좌관으로 임용되면서 서울시 상계 소각장의 환경성에 대해 서울시에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환경운동을 시작했다. 특히 생활폐기물과 관련해 소각 방식의 대안에 해당하는 '생 쓰레기 분리 운동' 등을 여성민우회 회장이던 아내 신경혜와 함께 추진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소각장의 다이옥신 검출량을 조작한 일명 '다이옥신 측정치 조작사건'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단식을 통해 서울시에 다이옥신 검출 기준으로 0.1 나노 그램을 요구해 관찰하거나 환경부와 함께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일정 정도의 혜택을 제공하게끔 하는 폐기물 시설 설치 촉진법 등을 제정하는 데 참여하기도 했다(우원식 구술 참고). 한편 중랑천 물고기 폐사 사건을 기점으로 결성된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을 통해 중랑천 수질 개선을 실현하기도 했다.

이렇듯 자택 기록을 정리·기술하는 데에 우원식의 생애사적 맥락을 활용했다면, 지역사무실 기록의 경우 자택 기록과 달리 17대 이후 의정활동 시기에 생산된 기록의 비중이 대폭 증가한다. 즉 국회의원이라는 신분과 권한을 활용한 의정활동과 그 산출물인 기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의 기능적 맥락이 기록 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록연구팀은 의정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국회 일정이거나 대수, 즉 연대기적 맥락과 기능적 맥락, 즉 국회의원의 고유기능인 정책연구·입법 활동, 국정 감독, 정치·정당 활동·의회 외교,

선거·의정 홍보, 지역구(노원구) 활동 등을 시리즈 혹은 하위 시리즈로 도출하고, 귀납적으로 지역사무실 기록을 건으로 식별하는 단계에서 물리적으로 묶여 있던 상태를 보존해 도출한 파일 등 하위 단위와 연결해 정리했다. 이 예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표 11>)과 같다.

<표 11> 기능적 맥락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무실 기록 정리 예시

시리즈	하위 시리즈	파일
17대 국회	정책연구·입법활동	서울균형발전을위한국회의원모임
		폐기물처리·자원화정책
		우리강도보순례
		맑은물포럼
		근로환경·일자리
		기타 환경정책자료
	국정감독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경부운하문제
		기타 국정감·조사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
		예·결산특별위원회
	정치·정당활동·의회외교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선거·의정홍보	17대총선(열린우리당)
		의정홍보
	지역구(노원구) 활동	

문제는 이러한 분류를 활용할 때 특정 자료요구서 등이 국정감독 기능에 해당하는지, 입법·정책연구 기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불가피한데, 실제 이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점이다. 가령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정당에서 생산한 기록의 경우 국정감독 기능으로도 해석 가능하며, 광범위한 정치 활동은 곧 정책연구 기능에 기여하기도 한다. 특히 을지로위원회 기록의 경우엔 정당 활동에 속하긴 하지만, 입법 기능, 정책연구 기능, 정부 견제 및 감시 기능, 나아가 갈등 조정과 중재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한 흔적이 담겨있다. 말하자면 국회의원은 자신의 의정활동을 기능별로 구분해 바라보지 않으며, 여러 기능을 정치란 관점으로 통합해 의미부여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정책연구나 입법, 국정 감독과 정당·정치 활동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또 국정 감독 서브 시리즈에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경부운하 문제 등의 화제와 기타 국정감조사를 포괄할 수 있는 단위가 있다. 단 이와 같은 구조에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한 자료요청 활동기록을 정리하기 어렵다. 대개 상임위원회 활동은 노동부, 환경부 등 상임위별 소관 기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에 대한 기록 보관 역시 특정 상임위원회 폴더-각 기관 폴더구조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도, 상임위원회 혹은 각 소관 기관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정리구조·전거 등에 산입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의정활동 기록의 유형(형태)을 세분화해 분류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생산되는 의정활동 기록의 유형을 식별함과 동시에, 해당 기록이 의정활동의 어떤 단계에서 생산된 기록인지를 보여줄 수 있게 했다. 특히 문서류라는 대분류에 속하는 중분류, 그중에서도 의정활동 기록에 특화된 형태(유형)로 기록을 분류해 의정활동의 순차적 맥락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를 남겨놓았다. 다음(<표 12>)은 형태분류 중 문서류에 속하는 중분류 예시를 정리한 표이다.

<표 12> 순차 맥락을 가시화하기 위한 형태분류 예시(문서류)

대분류	중분류	내용
문서	보고서	보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 국회의원 정책보고서 포함
	질의자료	상임위 등 각종 회의에서 정부에 질의하거나 의원이 참고하게끔 보좌진 등이 작성한 문서. 질의서, 서면질의서, 발표자료 포함
	보도자료	언론 등 보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
	회의록	위원회·협의회 회의 등을 녹취·기록해 둔 문서
	공문	의원실 발행 공문, 공식 업무 목적으로 주고받은 수발신이 명확한 서신 등
	자료요청서	의원실(보좌진)에서 자료요구권 등 권한을 통해 각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문서
	요구자료	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
	민원자료	각 단체 및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예산·지역 현안 해결 등을 목적으로 요청해 온 내용이나 이에 관련한 문서
	말씀자료	특정 행사나 회의 등 자리에서 의원이 축사, 연설 등 말할 때 참고할 목적으로 보좌진 등이 작성한 문서. 단, 질의는 제외
	의안	국회의원 및 위원회 차원에서 상정(발의)·처리·가결(의결)된 법률안 및 결의안 등 안건이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된 문서. 예·결산안 포함
	예산요구서	국회·정부, 관계기관, 개인 등이 특정 항목에 관한 예산을 요구할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
	합의문	교섭단체(정당) 간,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 사회 주체 간에 합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
	답변서	국회의원 등의 질의에 대응하여 각 기관 등이 작성한 답변을 포함하는 문서

이러한 유형을 참고할 수 있다면 자료요청-요구자료-보도자료-질의서-회의록-의안-정책보고서 등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순서에 대한 추론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자료요청서와 요구자료가 어떻게 같은 현안이나 주제를 다룬 질의서와 연계할 수 있을지, 어떻게 같은 현안에 관한 숙의 과정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실제 보좌진 기록을 보면 자료요청서, 질의서 등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별로 정리된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볼 때 각 상임위원회와 자료요청 및 질의의 대상이 되는 소관 기관에 대한 맥락 역시 함께 보존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기능에 따른 정리는 또 다른 중요 맥락인 국회의원의 관점과 가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실제 의정활동에는 개인적 배경이나 국정철학 등의 요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록연구팀은 별도의 개별 의정활동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를 기록과 연계하는 방안을 활용했다.

3.2 선거와 의정활동 키워드 연계

기록연구팀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수집·정리·기술하는데 범용해 쓰일 수 있도록 기능, 순차, 연대기, 보관 이력 등 다양한 맥락을 탐색해 이를 출처(소장처), 형태, 계층 등 다중분류로 활용하는 등 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모색하고자 했다. 한편 기록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정보, 즉 인물·단체·주제(키워드) 선거(authority)를 기록단위와 연계해 향후 한 국회의원이 걸은 경로에 얽힌 다양한 단체의 역사와 내용을 선거로서 축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당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와 조직의 역사를 가교로 다른 국회의원의 기록 간 연결을 도모할 수 있다. 다음은 기록 시리즈별 선거를 연계한 예시이다(<표 13>).

<표 13> 기록 시리즈별 선거 연계 예시

시리즈	선거		
	인물	단체	주제
정계입문기: 평민당 및 평민연	문동환, 박영숙, 임채정, 이해찬, 장영달, 김근태	국민운동본부, 평화민주당, 평화민주당인권위원회, 평화민주통일연구회, 한국기독교(교)청년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민주연합당(신민당),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장기수가족협의회,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인권백서(진상규명)
국회의원 보좌진 및 서울시의원	-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서울시정발전연구모임, 새정치국민회의, 쓰레기문제해결시민회의, 여성민우회, 노원상계소각장주민대책위원회, 녹색지방자치연구회,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노원놀이마당사랑회	생쓰레기퇴비화운동
17대 국회	-	서울균형발전을위한국회의원모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행정자치부, 환경부, 맑은물포럼,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정의,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열린우리당, 환경을사랑하는중랑천사람들, 한국스카우트서울북부연맹, 불턴티어크로스(사회적기업)	반환미군기지환경오염문제, 우리강도보순례

특히 단체 선거의 경우 환경노동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이 속했던 각종 단체·조직이나 정당에 대한 연혁·변천에 대한 맥락이나 그 관계 등을 포착하고 향후 지속해서 추적해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은 비슷한 궤적을 밟은 임채정, 김근태 등 관련 인물에 대한 구술이나 기록과 연계하며 보완해 갈 수 있다. 다만 인물이나 주제 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를 선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향후 개발될 필요가 있다.

한편 선거와 더불어 기록연구팀은 우원식의 사회와 현안에 대한 고유한 개성과 관점이 담긴 키워드를 통해 의정활동 기록을 이해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원식에 특화된 의정활동 키워드 9개, 즉 ‘노동존중사회’, ‘사회적 대화’, ‘균형발전’, ‘장애인권리증진’, ‘기후환경보전’, ‘생명안전사회’, ‘역사바로세우기’, ‘노원구발전’ 등을 도출해 이를 기록에 연계했다. 키워드를 선정할 때는 상임위원회 등 국회회의록에 담긴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우원식의 오랜 의정활동의 줄기라 할 수 있는 주제(분야)와 함께 그 가치와 방향성이 담길 수 있도록 동사형 어미를 합성하는 방식이었다. 가령 단지 재생에너지가 아닌 에너지전환, 기후환경이라기보다 기후환경보전으로 선정하는 식이다. 물론 이러한 키워드의 단위나 수준이 세부적으로 조정·종합될 필요가 있으나, 의정활동 키워드에 따라 기록을 분류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우원식의 개성과 정치적 비전을 통해 기록에 접근하고 그의 시선을 통해 기록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 같은 환경부 대상 질의서라 하더라도 국정 감독이라는 고유 기능을 출처 맥락으로 상정한 체계 속에서 기록을 접하는 것과 ‘기후환경보전’이라는 의원 개인의 가치가 담긴 키워드를 통해 질의서를 접하는 것은 기록 해석에 있어 큰 차이를 낳을 수 있다.

4. 결론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생산·취득하며 활용하는지, 그리고 의회 기능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기록뿐 아니라 그 맥락이 함께 추적될 때 비로소 명확히 드러난다. 풍부한 맥락의 축적이 동반되는 기록화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이용자, 기록관리자 모두가 의회 활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국회 및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촉진한다(박태선, 2024).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기록의 복합적인 생산 맥락을 자세히 분석하고, 기존 기능분류 중심의 수집·정리 체계가 실제 기록 생산·보존·활용 현실과 유리되어 있음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기록관리 방법론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비판적 고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활용한 방법론과 그 성과에 대한 전문가 면담, 기존 연구와의 폭넓은 비교분석 등 평가(환류) 작업이 요구된다.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이는 연구자가 사례 기술과 내부 맥락 도출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출처(provenance) 맥락에 기반한 새로운 정리 모델을 제시하였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복합적인 생산·보관 환경을 반영하여 기능·순차·연대기·보관 이력 등 네 가지 출처 맥락 유형을 도출하고, 이를 기록 정리를 위한 준거로 적용했다. 이는 입법기관의 복합적인 역할과 실제 기록 생산 환경을 기록관리에 반영하려는 시도로서 학술적인 의의를 지닌다.

셋째, 사례 기반의 귀납적 접근을 시도했다. 국회의원 우원식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자택, 지역사무실, 보좌진 등 다양한 소장처와 소장 기록의 특징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정책 규범적 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록 환경과 개인의 생애사적 맥락을 반영한 기록관리 실천 모델을 제시했다. 다만 기록연구팀 현실 여건상 보좌진 기록 수집·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심층적인 논의로 전개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과제는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해서 논의해 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과 방법론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결 과제가 남아 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및 보좌진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기록의 열람 권한과 공개 범위, 기증 방식이나 보안 대책, 완전 폐기 방안 등 장기적으로 기록을 보존·활용하는 조건을 명확히 합의할 필요가 있다. 재당선 홍보나 백서 발간, 기록정보서비스 등 실질적인 기록 활용 방안과 더불어 국회의원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방책 개발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또, 회의록, 방송 영상, 정책자료, 홈페이지·SNS 등 각 소속기관과 개인이 분산 관리하는 의정활동 기록을 국회의원 관점에서 통합·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상당수가 USB, 외장 하드 등에 주로 보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전자기록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AI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역시 주요 과제다. 특히 향후 AI와 아카이브의 공존 가능성, 국회 환경에 최적화된 AI 모델 개발과 이에 따른 기록 보안·데이터 권한·비식별화 등 민감할 수 있는 쟁점, 나아가 AI 도입에 따른 기록관리자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에는 국회의 기능뿐 아니라 정당을 비롯한 외부 단체의 활동, 사회적 사건이나 주제, 나아가 당사자(시민)의 삶 등의 맥락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다. 의회를 둘러싼 공통 맥락이 전거의 형태로 축적되고 서로 연계되면 국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에 대한 포괄적 접근과 함께 다양한 국회의원의 기록 컬렉션이 수집·정리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9호.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6). 국회의원 기록관리 기본계획.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20). 국회의원 기록관리 매뉴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24). 국회 의정활동기록물의 수집·관리 기본정책 수립 최종보고서.
 국회도서관법. 제20560호.

- 국회사무처 (2024). 법제기준과 실제. 서울: 국제법제실.
- 김장환 (2018).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55, 39-71. <https://doi.org/10.20923/kjas.2018.55.039>.
- 박태선 (2024). 정치영역 아카이브의 사회적 공공성: 정치의식과의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오명진 (2017). 개인 기록의 특성과 기록화 전략. 기록학연구, 53, 79-117. <https://doi.org/10.20923/kjas.2017.53.079>.
- 이경선 (2017).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화에 관한 검토. 입법학연구, 14(1), 211-233.
- 이원영 (2004). 의회기록의 특질과 종류. 기록학연구, 9, 110-142. <https://doi.org/10.20923/KJAS.2004.9.110>
- 이재윤 (2024). 수집기록 정리를 위한 출처주의 연구: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재윤, 김의진, 박태선 (2024).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4), 47-66.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4.047>.
- 장연희, 윤은하 (2024). 국회의원실 기록관리의 현황과 개선 방안-보좌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1), 187-204.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1.187>.
- 장주영 (2016). 국회의원 개인기록의 기록화 전략: A 의원의 개인 전자기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전자정부법. 법률 제20654호.
- 전진영 (2011). 국회 입법교착의 양상과 원인에 대한 분석. 의정연구, 17(2), 171-196.
- 정태영, 김유승 (2012).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1), 141-165.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1.141>.
- 최혜영, 이승일 (2019).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개선 방안 연구: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3), 97-121.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3.097>
- 한은정, 임진희 (2009). 국회의원 활동기록의 특성과 관리방향. 기록학연구, 21, 117-167. <https://doi.org/10.20923/KJAS.2009.21.117>
- 홍주현 (2019). 대한민국 국회 보좌관입니다. 파주: 지콜론북.
- Bearman, D. A. & Lytle, R. H. (1985). The Power of the Principle of Provenance. *Archivaria*, 21, 14-27.
- Derrida, J. & Prenowitz, E. (1995). Archive Fever: A Freudian Impression. *Diacritics*, 25(2), 9-63. <https://doi.org/10.2307/465144>.
- Meehan, J. (2010). Rethinking Original Order and Personal Records. *Archivaria*, 70, 27-44.
- Scott, P. J. (1966). The Record Group Concept: A Case for Abandonment. *The American Archivist*, 29(4), 493-504. <https://doi.org/10.17723/aarc.29.4.y886054240174401>
- Zhang, J. (2012). Original Order In Digital Archives. *Archivaria*, 74, 167-19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Hye young & Lee, Seung-il (2019).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System: Parliament Activity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9(3), 97-121.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3.097>
- Electronic Government Act. Act No.20654.
- Han, Eun-jeong & Yim, Jin-hee (2009). The Characteristics and Maintenance of Assemblypersons' Activity Record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1, 117-167. <https://doi.org/10.20923/kjas.2009.21.117>

- Hong, Joo-hyeon (2019). I am an aide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gcolonbooks.
- Jang, Juyeong (2016). Documentation Strategies of National Assemblymen of Personal Paper – Focus on Personal Electronic Records of Assemblymen A.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 Jang, Yeonhee & Yoon, Eun-ha (2024).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Records Manage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fice: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id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4(1), 187–204.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1.187>
- Jeon, Jinyoung (2011). The Causes of Legislative Gridlock in Korean National Assembly.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17(2), 171–196
- Jeong, Tae-young & Kim, You-seung (2012). A Study on the National Assembly's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Focused on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1), 141–165.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1.141>.
- Kim, Jang-hwan (2018).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5, 39–71. <https://doi.org/10.20923/kjas.2018.55.039>
- Lee, Jaeyun (2024). A study of the principle of the provenance for arranging collections : Focusing on the 5·18 archives.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 Lee, Jaeyun, Kim, Uijin, & Park, Taesun (2024). Reflections on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Legislative Activity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4(4), 47–66.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4.047>
- Lee, Kyung sun (2017). Review on the legislation of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Law」. *Journal of Legislation Studies*, 14(1), 211–233.
- Lee, Won-young (2004). A Study of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Congressional Record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9, 110–142. <https://doi.org/10.20923/KJAS.2004.9.110>
- National Assembly Library Act. Act No.20560.
- National Assembly Library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16). Basic Policy for Member of Parliament Records Management.
- National Assembly Library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20). Records Management Manual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 National Assembly Library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24). Final report on Basic policy for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activity records.
-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2024). Legislation and Practice. Seoul: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Office.
- Oh, Myung jin (2017). The Nature of Personal Papers and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Personal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3, 79–117. <https://doi.org/10.20923/kjas.2017.53.079>
- Park, Tae sun (2024). The social publicness of political sphere archives : A centered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with political consciousness. Doctoral disser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ct No.20309.